

2003년 석유사업 회고

글 · 정 태 응 | 한국경제신문 기자

어느 해나 일년을 마감할 때면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하지만 2003년 국내 석유산업을 돌아보면 유난히 그 말이 실감나는 것 같다.

연초부터 발발한 이라크전쟁으로 원유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안정적인 원유도입을 위해 정유업계는 물론 정부도 노심초사 마음을 졸여야 했다. 다행히 전쟁이 오래 끌지 않아 한시를 놓을 수 있었지만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국제정세 변화에 종속되어야 하는 설움을 또 다시 느껴야 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이 서구 국가에 비해 원유 도입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아시아 프리미엄'의 문제가 또다시 현안으로 불거졌고 최근에는 이들 3국이 모여 공동구매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이라크전쟁의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대선자금 수사와 재신임 논란을 촉발시켰던 'SK사태'도 2월부터 한해를 짓누르는 대형 사건이었다.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의 대주주이자 재계 3위 SK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국내 최대 정유업체인 SK주식회사는 8,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SK네트웍스에 출자전환해야 하는 등 사태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했다. 특히 유럽계 소비린 자산운용이 SK주식회사 주식을 14.99%나 취득하면서 적대적 인수 합병(M&A) 논란이 빚어졌고 국내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의 경영권 위협까지 번지는 등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이 번져 갔다. 다행히 SK주식회사와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SK네트웍스가 희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SK그룹의 해체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또 최태원 회장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다시 1대주주(15.93%)의 지위를 탈환했다. 그러나 소비린이 200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현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어서 경영권 논란은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SK주식회사는 채권단과 힘겨루기로 한때 원유도입 유전스(기한부어음) 한도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역설적으로 정제시설 가동률을 낮춰 운영효율 최적화를 추구, 분기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국내 석유산업의 영업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유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시사해주는 사례다.

사실 올해는 이라크전쟁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정유업체에는 비교적 유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된 게

그동안 일부 석유 수입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일정 비축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관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면서 석유제품을 들여와 판 뒤 회사 문을 닫고 또 다른 회사를 세우는 '치고 빠지기' 식 영업행태를 보여 왔었는데 페타코 사태는 그런 부작용의 '총결산'이라고 부를만하다.

사실이다. 석유수입사와의 관세차등화 문제가 할당관세 인하라는 방식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데다 석유수입부과금도 한때 내리는 등 정유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할당 관세가 아니라 도입관세 자체를 낮추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을 정도다.

그동안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온 석유수입사들이 이라크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올 한해의 특징이다. 국내 최대의 석유제품 수입업체였던 '페타코'의 부도와 경영진 잠적사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페타코는 3,400만 달러에 달하는 신용장(L/C) 개설대금과 1,000억원대 지방세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석유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거둬들인 선납금을 떼먹는 등 피해액수가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석유 수입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일정 비축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관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면서 석유제품을 들여와 판 뒤 회사 문을 닫고 또 다른 회사를 세우는 '치고 빠지기' 식 영업행태를 보여 왔었는데 페타코 사태는 그런 부작용의 '총결산'이라고 부를만하다.

페타코뿐만 아니라 다른 석유수입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9개의 석유수입업체들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하는 등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석유수입업이 자유화된 이후에 매년 꾸준히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망하는 곳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등록된 66개 업체 가운데 지금까지 23곳, 비율로는 34.8%가 문을 닫았다. 석유수입업체의 3분의 1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사업 자체가 취약해진 것은 아니다. 휘발유 경유 등 정질유의 올해 수입사 시장점유율은 8%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사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들어 그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예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니다. 급성장과 일부 혼란을 거쳐 이제 석유제품 수입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접어들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중유나 항공유등 특정 품목만을 집중적으로 수입하기로 특화하는 등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국내 석유산업은 이제 정유업체와 석유제품 수입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체제로 굳어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정유업계는 수입업자의 공세뿐 아니라 신종연료의 꾸준한 등장이라는 위협에도 맞닥뜨리고 있다. 페타코 못지않게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세녹스' 사태는 1심에서 서울지법이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녹스는 당장 판매를 재개하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등은 단속과 세금추징에 나서는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한국주유소협회와 세녹스판매인연합회가 각각 집단행동에 나서는등 소매상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으며 비슷하게 섞여 파는 '유사세녹스'가 점조직 형태로 팔려나가는 형국이다. 뒤늦게 정부는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가 휘발유 전체 시장의 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입업체 8%에 이어 신종연료마저 8%대를 차지하고 있어 정유업

계로서는 16%에 달하는 내수 시장을 뺏기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자동차 연료 대기환경 기준 강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안도 정유업계로서는 만만찮은 시련이다. 정부는 경유승용차를 도입키로한 2005년까지 '유로4' 기준에 맞춰 경유의 황 함유량을 50ppm으로 낮추도록 했고 정유업계는 2006년 30ppm, 2007년 15ppm, 2008년 10ppm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황 함유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황시설등 고도화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며 그 비용만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극도로 꺼려왔던 정유업계로서는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의 세금 차이를 현행 100: 55: 45에서 2006년 100: 75: 60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LPG업계는 경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고사당하고 말 것이라면서 100: 85: 50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환경 기준 강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안 모두 해를 넘겨서까지 논란을 낳을 것임은 분명해지고 있다.

SK주식회사와 LG칼텍스정유에서 노사갈등으로 파업위기까지 치달았던 것도 올 한해를 회고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항목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특성상 파업이 불가능하리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가 이뤄지는 사이에 파업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두 사업장에서 파업 가능성이 대두되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노사화합이 다른 산업뿐 아니라 정유업계에도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음이 분명해진 사건이었다. 더불어 정유업체 직원들의 연봉이 공개되어 부러움과 질시를 샀던 점도 세상을 놀라게 한 뉴스 가운데 하나였다. LG칼텍스정유가 전격 공개한 임금체계에 따르면 고졸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이 5,97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각종 수당과 학자금, 복리후생비 등을 합할 경우 2002년에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가 3명, 9,0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20명에 달하는 등 정유업계의 고액 연봉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안팎으로 정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업계를 대하는 일반인의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아직까지도 적잖은 사람들은 정유업체들이 원유가가 오르면 잼싸게 기름값을 올리고 국제시세가 떨어지면 국내 제품의 가격인하를 늦추거나 쥐꼬리만큼 내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업체가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 한두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 값을 바꾸는 등 '담합'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특히 석유제품 수입사들로부터 쓴 기름을 도입한 일부 주유소들이 낮게 도입한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은 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은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유업체들은 그런 점에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보호막에서 안주해왔던 정유사들로서는 새로워진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 무엇

누가 뭐라 해도 정유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정제주의라는 정책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또한 중시되어야 마땅하다.

보다도 문란한 유통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가격은 담합 하듯이 같이 올리면서도 문란한 유통질서 회복은 '나 몰라라' 하며 시장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은 누가 보 기에도 옳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몇 년째 도입 논의만 무성했던 유류카드제 의 도입과 업체별로 기름에 화학물질을 넣어 자사제품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마키(유류식별제)' 제 도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수폴이건 무폴 주유소이건 어떤 회사 제품을 판 매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상표표시제를 주유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동률이나 시장점유율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익성을 높이려는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 올해는 경제 침체와 수입제품의 영향으로 정유업계의 가동률이 예전에 비해 낮아졌는데 그같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도 정유업체들의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유가·환율·금리 등 세계 경제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요동칠 때마다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 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중동 국가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은 나 름대로 안정적인 원유수급을 확보 받고 아시아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제휴관계로 부터 자유로운 업체들은 석유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원개발은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과 맞먹는 것으로 정유업체 고유의 역할이다. 그동안 한국석유공사와 업계가 베트남 등 여러 곳에서 많은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상당한 수익을 거두기는 했지만 개발자급도는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우리와 사 정이 비슷한 일본이 15%대 자급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최고 20%선까지 목표를 높여 잡 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유공장 운영 노하우와 기술 수출등 무형의 자산을 상품화하는 노력도 배가 시켜야 한다.

정유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자원개발은 막대한 규모와 장기간의 투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및 기금의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뒤를 받쳐줘야 한다. 정유업체들의 탈황시설 증설 등 시설투자에도 정부 차원의 배려가 바람직하다. 환경투자는 일개 기업이 맡아서 하기에는 공익적 성격이 크고 그만큼 끈질기고 세심한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정유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정제주의라는 정책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 또한 중시되어야 마땅하다.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가 점차 줄어든다고 하지만 석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한국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